

日, 환경세 도입 검토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산화탄소 등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효과 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세 등의 새세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지난 1월 9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세 등을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전용하거나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등에 따라 과세하는 탄소(炭素)세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정부의 지구온난화 대책 세계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6월 2005년부터 3년 이내에 "온난화 대책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EU환경규제 대응책 시급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의 환경관련 무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월 14일 'EU의 환경관련 무역규제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2001년 대(對)EU 수출액 196억달러 중 70%에 이르는 124억달러가 환경규제 적용 대상이었고 앞으로도 환경관련 무역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오는 2006년부터 납·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체물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유해물질 사용금지지침'(RoHS)이 발효될 경우, 국내 관련기업은 VCR 1개 품목에서만 대체물질 개발, 생산시설 교체 등으로 1조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EU는 자동차의 경우 이산화탄소(CO₂)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폐자동차 처리 매납·카드뮴·수은 등 중금속이 자동차의 어느 부품에서도 검출되면 안된다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는 생산자가 폐차를 무료로 수거한 뒤 자동차 중량의 85% 이상을 재사용토록 할 계획이어서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 수출업체가 물어야 할 추가 비용은 대당 2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U는 작년에는 소각이나 매립되지 않은 폐전기·전자제품을 생산자가 일정비를 회수해 재활용토록 의무화한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처리지침을 채택하는 등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日, 오존을 파괴하지 않는 불소계 세정제 판매

일본 다이킨공업주식회사가 지구환경보전에 공헌하는 오존층 파괴계수 제로인 불소계 세정제 HFE-S7을 2003년 1월초부터 발매에 들어갔다. HFE-S7은 하이드로플루오르에테르: HFE-347pc-f이다.

이 물질은 일본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의 위탁으로 (재)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RITE)가 개발, 선정한 물질이다. RITE의 연구개발협력기업 중 하나인 다이킨공업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불소계 세정제로서 HCFC141b나 HCFC225가 사용되고 있는데 오존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2020년까지 점차적인 삭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HFE-S7은 그 특징으로 (1)오존층파괴계수가 0, (2)불연성, (3)린스성(행굼, 유연성)이 뛰어남, (4)표면장력, 증발잠열이 낮음, (5)금속-플라스틱-고무 등 세정장치에 사용되는 재료나 피세정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뛰어난 적합성 등을 들 수 있다.

광학렌즈나 액정분야에서의 제조공정시 린스세정, 증기세정 및 증기건조용 용제로서 특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장에서의 세정제 변경요구에 맞춰 2005년에는 약 20억엔의 판매를 전망하고 있다. 가격은 1킬로그램 당 3000엔에서 5000엔.

